

“동학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해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완주군법원 설치·새만금 사업 SOC 예산 복원 등도 촉구

전북지역 시·군의회의장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과 완주군법원 설치,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7차 월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 고경운 의장이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있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오늘날의 평등사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지평을 열며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킨 동학



전북지역 시·군의회의장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과 완주군법원 설치,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

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숙명”이라며 헌법 전문 포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제안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도 채택했다. 현재 완주군은 전북의 다섯 번째 도시임에도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특히, 지난 2012년 군 청사를 완주지역으로 이전한 후 11년이 지난 후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완주를 포함한 13곳이다.

의장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복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채택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내 안전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서점조합, (주)웅진북센과 전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웅진북센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0권씩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1만권 도서 기증한다

웅진북센, 전주시와 독서문화 발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주)웅진북센이 책의 도시 전주 시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만여 권의 도서를 후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서점조합, (주)웅진북센과 전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웅진북센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0권씩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하기로 했다. 시는 기증도서를 활용해 시민 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웅진북센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이어온 전주시서점조합은 전주시 독서 진흥 행사지원 등을 통해 독서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수 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

시 서점조합은 약 60여 개의 전주 시 서점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전주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전주시서점조합과 손을 맞잡은 주식회사 웅진북센에서 전주 시민을 위해 통 큰 도서 기증을 결정한 만큼 전주 시 도서관에서도 전주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웅진북센으로부터 기증받은 1000여 권의 도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 전주독서대전’에서 ‘특개비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북마켓 도서구입자에게 1권씩 지원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주민 편의 위한 27개 신규 시책 발굴

전주시 완산구, 내년도 추진 시민생활밀착형 사업 선정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가 민선8기의 핵심사업과 시정 현안을 구체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시책 사업을 발굴했다.

완산구는 부서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자체 회의를 통해 타당성·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산사업 18건과 비예산사

업 9건 등 총 27건의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구는 ‘안전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북지리진 △시민 편의 △환경 정비의 4개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중점을 둔 안전도시 분야의 경우 △전주전·삼천 산책로 안전지킴이 운영 △공영 가로등 24시간 상시이용 안심벨 설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스마트 보안등 구축 △드론을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등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심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세대별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도입 △365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및 불법광공

물 단속반 운영 등이 신규 시책 사업으로 선정됐다. 끝으로 시민 편의 분야의 경우 △건물대장 DB구축 사업 추진 △공한지 무로주차장 선정평가시스템 구축 △주차장 의견진출 접수 상황 알림톡(카카오톡)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선정됐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민밀착형 정책을 펼쳐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역 디지털 경쟁력·인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디지털 신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해당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챗GPT의 산업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9일 2시, 전주 데미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세미나인 ‘2023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Tech Trend Concert’를 개최한다.

디지털 신기술분야 트렌드 세미나는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교육 연계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되며, 3회째를 맞은 올해 세미나는

‘오늘의 기술,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즈니스책임자가 ‘2024 ICT 테크 트렌드 : AI, XR, IoT를 중심으로’, 오상진 서울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디지털전환시대 ICT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올해 세미나에서는 최근 인공지능의 붐을 일으킨 ‘챗GPT’가 유행을 넘어 추후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발표도 준비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ICT/SW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내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아시아태평양 대표 관광도시들, ‘전주선언문’ 채택

전주시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관광도시들이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14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 총회’의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산업 발전과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을 담은 ‘전주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TPO 총회 기간 진행된 심도 깊은 토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전주선언문’에서 회원도시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도전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도시들은 회장도시인 부산의 2030 세계엑스포 개최를 적극 지지

하는 등 회원도시의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도시들은 이번 총회에서 TPO의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한정됐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회원 자격을 이번엔 전 세계 모든 도시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기구의 명칭도 이를 반영해 ‘글로벌 도시 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Global Cities)’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전주시는 TPO 회원도시의 승인을 받아 중국 산야와 더불어 공동회장도시로 다시 선출돼 오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TPO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주차정책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 개최

전주시는 14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교통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주차정책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주차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방향 설정 및 주차 환경개선지구 선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수행기관인 (유)이플엔지니어링의 김경민 이사는 ‘2023 전주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식, 필요성, 향후 활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에 위원들은 전주시의 급속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제도과 주차공유, 주차문화, 시민들의 인식개척 등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중·장기 주차정



책 계획 수립 시 △주차 공간 확충 △신진 주차시스템 구축·운영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등 4대 분야의 11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 주차정책자문단은 “고질적인 전주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차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주차문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양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